

# 전남 수출기업 환율변동에 무방비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전남 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율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에도 못 미치는 등 대다수 수출업체가 환율변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역 중소규모 수출 유망기업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율변동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환율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8곳으로 전체의 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변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118개(93.7%) 업체는 ▲수출금액이 적어서(33.3%) ▲환율예측이 어려워(19.2%) ▲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아(17.9%) 등을 이유로 들었다.

## '환율변동보험' 가입 업체 7%에도 못 미쳐 환율상승 막연한 기대 금물...대비가 최선

전남도는 이처럼 지역 업체들이 환율변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관련 ▲지역 내 대다수 수출업체의 연중 수출금액이 10~100억 원 안팎에 불과하고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데 ▲환율이 조만간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환율변동보험을 취급하는 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광주·전남지

역 수출업체들의 보험가입액은 4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2억 원에 비해 45.7%가 감소했다.

수출보험공사 측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최근 환율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만간 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할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약 당시의 환율에 비해 계약만기 시점의 환율이 오를 경우, 환율이 오른 만큼의 차액을 수출보험공사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 측은 그러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환율변동보험에 가입한 광주·전남지역 수출업체가 모두 7억5천만 원을 환율하락에 따른 손해보전금으로 받아갔으며, 환율상승에 따른 환수금액은 3천100만 원에 그친 만큼 환율급변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율변동보험은 수출시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계약만기 시점에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낮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보전, 수출기업의 리스크(위험)를 떠안아 주는 반면 계약만기 때의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높으면 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시설

## 광주·전남 '상생 합의문' 실천이 중요하다

광주와 전남도가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공동 보증을 취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시·도는 28일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를 비롯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행정협의회를 갖고 합의문을 채택, 14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시·도의 이번 합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역경제살리기를 역점사업으로 내걸며 광주와 전남의 협력과 상생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점을 감안하면 시·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광역단체간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원래 한 뿌리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같은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수도론'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광역단체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새삼 증명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수도론'은 광주와 전남을 비롯 지방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광주와 전남도가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공동 대처키로 하고 정부에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또 광주권 주변 외곽순환도로를 조기 건설하고 2012 여수세탁박람회유치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 현안을 힘 모으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도는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 성공적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두 지역이 힘을 합치는 것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북한, 6자회담 복귀 마지막 기회 살려야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28일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제재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도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백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ARF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는 관련국들의 노력이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상원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물자 거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북측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도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일본 역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고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선택

의 폭도 그만큼 좁아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북측은 이제 '버티기'를 끝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 유엔 안보리 결의도 전면 배격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ARF의 10자회담에 참여해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고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강경대치 국면을 푸는 길이다.

북한은 조전 없이 6자회담 테이블로 나와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도 6자회담 안에서 얼마든지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6자회담을 피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 남악신도시에 설립된다

전남내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갖고 이사회를 구성했다.

도는 남악신도시 내 택지개발지구에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모두 160억원을 들여 부지 3천평에 연건평 3천평(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8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의 약속'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8일 전남도청에서 민선 4기 첫 광역행정협의회를 마친 뒤 '상생의 약속'을 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날 광주권 외곽도로건설, 'BUY-광주-전남' 운동 전개 등 14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청 제공>

# 부도덕한 교육부총리 '사퇴'여론 고조

## 중복 논문제출 추가 확인...輿 일각서도 제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소속된 국민대 연구팀이 두뇌한국(BK)21 사업비를 받은 뒤 과거 논문을 재탕한 김 부총리 논문을 BK21 연구실적인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김 부총리가 전남 실무자의 실수로 동일한 논문을 2개의 BK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문 부풀리기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참여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2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

대 교수 재직때인 19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직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999년 12월 이 논문을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제목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로 바꿔 게재했다.

두번째 논문(1999년 12월)은 BK21사업 지원금을 받기 이전인 1998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BK21 사업 실적으로 보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의 논문이 BK21 지원비를 받기 이전에 작성된 것과 동일한 논문인지 모르고 실무자가 BK21 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 당 전여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들으면서 더 이상 교육부총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자의 도리를 넘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온 사람인가 회의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공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가세했으며 민주당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교육부 수장의 도덕적 문제가 교육행정을 마비시키는 치명적 문제로 될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와 당사자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사퇴론 불거라는 공식 입장을 보여온 여당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유 소속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사퇴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1면 '웃음클럽'서 계속

이들이 보여주는 웃음법은 비행기 웃음, 조개 웃음, 와이퍼 웃음, 스트레스 잡기 웃음 등 여러가지다. 언뜻 거창한 것 같지만 원리는 단순하다.

손을 비행기 날듯 하면서 목소리를 터뜨리면 비행기 웃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손짓과 발짓을 이용해서 웃으면 누구나 새로운 웃음법을 만들 수 있다.

임영란(여·47) 한국웃음경영연구소 소장은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더라"며 "그러나 웃으면 반드시 웃을 일이 실제로 생긴다"며 억지웃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심한 이들에게 이들이 추천하는 웃음법 몇 가지. 하나는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차 안에서 운전 중 맘대로 웃기. 두번째는 핸드폰 웃음법으로 핸드폰을 들고 남과 대화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웃으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집안 거실에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웃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회원들은 힘주어 말한다. "광주 시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웃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하하하"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전남대 명예 박사학위

조창현(71·사진) 중앙인사위원장이 28일 전남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정부의 인사기능을 일원화하고 공직 문화를 개방했으며 고위공무원단 등 제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학술 출신인 조 위원장은 미국 펠루복대와 한양대에서 30여년간 행정학을 가르쳤으며 경실련 공동대표로 시민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한화갑(맨 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 첨단산단 광산업단지내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제품 개발업체인 (주)나노텍을 방문,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화갑 대표 "한국정치 새 틀 짜겠다"

### '중소기업간담회' 참석 광주방문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계계편과 관련 "창조적 파괴의 고통을 겪어야 창조적인 공조도 이를 수 있다"며 "당 이념을 바꾸는 등 '민주당 프리미엄'도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간담회' 참석차 이날 광주를 방문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의 새 틀을 짜는데 민주당이 중심에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호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과 관련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

만 민주당의 정치 중심은 광주이며,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순형 의원의 컴백으로 수도권에서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태 시장과 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부터 매일 민선현장을 찾았다는 한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무진식품, (주)스페이스 파워, (주)나노텍 등 광주 광동산단과 참단단지 내 중소기업 6곳을 잇따라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상경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1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빛의만평

- 김중두

難兄難弟도다

## 눈길끄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일박기” 행위 처벌 형법 조항

합헌

“정당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

합헌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자금법 18조 1항과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토지를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관할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공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